

집중분석

北, 개혁·개방 없는 경제발전 5개년전략

# 7차 당 대회, '선택(先核)' 고수... 경제 視界 불투명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균형발전이다. 다른 하나는 자력갱생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통해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지는 내용이다.

북한은 과학기술조차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이므로 부족분을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5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개혁·개방 없이도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공할 수 있을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을 보다 면밀히 봐야 한다.

첫째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국가경제 발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한다. 김정일은 생전에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옷'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토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소득 3000~5000달러 내외 정도다.

둘째는, 1990년대 북한이 말 하는 '고난의 행군' 이후인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

다. 북한은 이 기간 중 위기에 직면했지만 극복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에 무너졌던 경제기반 가운데 농지 등 몇 가지를 복구했다.

셋째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전력산업,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이 경제의 선행 부문이 될 것이다.

넷째는, 사람과 조직이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박봉주 내각 총리를 포함해 경제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내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화돼 온 일을 몇 년 사이에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강력

하게 추진하고 있을 것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비록 개혁과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 내용을 당의 정책노선으로 채택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기간(5.6~9) 중 평양역 앞에 노동당기가 장식돼 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외부 지원 없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년 안에

과 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에

북한 경제는 워낙 대외의존도가 낮고 제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텨내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약을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핵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했다. 10%의 외부자원을 동원해서 경제의 도약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를 지키면서 그럭저럭 버텨나갈 것인지는 북한이 선택할 몫이다.

동용승 오리엔탈링크 대표

본 기사는 <자유마당> 6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

## “핵포기 불가”로 획기적 경제전략 어려운 북한 도약 동력 찾기 우선 핵포기라는 결단이 필요

제시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물이 풍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다.

## 성명서

# 북한의 '화전양면' 공세, 철저히 대응하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김정은 정권이 최근 남쪽을 향해 평화 공세를 펼쳐오다 북한 어선 및 단속정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이후 돌연 대남 협박 카드를 들이댄 데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7차 당 대회 이후 국방위·인민무력부·조평통 등을 동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온 북한이 27일 어선과 단속정의 서해 NLL 침범과 관련해 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와 총참모부 통첩장을 통해 "남측 함정이 0.001mm라도 넘어올 경우 경고 없는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대화와 보복을 넘나드는 전형적인 화전(和戰)양면 전술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1. 우리는 이같은 화전양면 전술이야말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남한의 '대화 거부' 입장에 맞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열을 교란하고 남한 내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며, 북한의 어떠한 술책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되돌릴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야말로 북한의 '핵보유국' 야망을 포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한다. 이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한 여세를 몰아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종국적으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한다.

1. 우리는 또한 북한군의 '조준 타격' 협박이 밖으로는 서해 NLL 일대를 다 시금 분쟁지역화 해 정전체제를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한편, 안으로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등 체제균열 조짐의 확산을 막으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천후 경계태세 확립 등 철저한 군사적 대비와 전략적 대응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이 북한이 국제정세를 직시하여 핵개발과 '200일 전투' 등 시대착오적인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지지한다. 아울러 핵 없는 한반도 시대 건설과 통일준비 차원에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100만 통일선봉대' 양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5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500만 회원 일동  
KOREA FREEDOM FEDERATION